

작성: 김태원 객원연구원(kim.tae.won@ydi.or.kr)

1. CPTPP 개요

□ 기원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기원을 두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유무역협정(FTA)
 - 2005년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 등 4개국이 출범한 TPP는 이후 2010년 미국과 호주 등 5개국이, 2013년 일본이 참여해 2015년 총 12개국이 협정을 체결
 - 출범 초기 TPP의 영향력은 미약했으나, 당시 ‘Pivot to Asia(아시아 회귀)’ 정책을 추진했던 美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참여로 급격하게 힘이 실림
 - 그러나 2016년 美 도널드 트럼프 前 대통령이 당선된 이듬해 미국은 일방적으로 TPP 탈퇴, 이후 일본과 호주 등 주도로 2018년 해당 협정을 ‘CPTPP’로 개정

□ 주요 내용

- 다양한 분야의 제품에 대한 역내 관세 전면 철폐 원칙
- 참여국들은 전자상거래에서 역내 데이터 거래 촉진, 데이터 서버의 현지 설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관세 부과 금지 등 디지털 보호주의 경계
- 금융 서비스와 외국 자본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 고급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투자 기업에 기술이전 강요 금지 등

〈표 1〉 CPTPP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높은 관세 철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 철폐율: RCEP 91.9%~94.5% 관세 양허 품목 수: 일본 95%, 베트남 97.9%, 멕시코·말레이시아·호주 99% 이상, 뉴질랜드·브루나이·싱가포르 100%
서비스 및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에 널리 사용되던 내용 → 통상적인 수준으로 유지 통신은 별도의 장으로 구별, 국제 모바일 로밍 서비스 관련 내용 도입 투자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국민대우, 최혜국 대우 보장 이행요건 부과 및 고위 경영진 국적 제한 금지
전자상거래 및 지적재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상거래에 관한 별도의 장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미 FTA보다 상세 주목할 점: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 의무 명문화(RCEP과 차이점) 지적재산권 관련 조항은 대부분 유예 중
국영기업 조항 신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영기업 및 독점기업이 상품·서비스 거래 시 민간기업의 영업 관행과 일치하도록 고려할 것을 명시, 국영기업에 특혜·보조금 지급 등 방지 목적 단, 공공정책 수행 시 제도적 유연성 부과
일부 유예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지적재산권 보호와 투명성 관련 조항으로, 미국의 탈퇴 후, 유예 조항으로 유보됨

□ 경제 규모

○ 한국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시장 확대 및 다변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CPTPP 미래와 우리의 대응방안’, 산업연구원, 2021)

- 북미 FTA, RCEP의 뒤를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의 Mega-FTA인 CPTPP의 2019년 기준 경제 규모는 △참여 11개국의 GDP는 전 세계 GDP의 12.8%인 11조 6,000억 달러, △무역 규모는 전 세계 무역액의 15.2%인 5조 7000억 달러, △인구 규모로도 전 세계 인구의 6.6%에 해당하는 6억 9,000만여 명의 거대 시장임

□ 회원국

○ 기존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새롭게 경제동맹체 추진

-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총 11개국)

- 참가국으로는 일본·베트남·싱가포르 등 한국과 교역이 많은 나라들이 포함돼 있으며, 최근 참가 신청을 한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1경제교역국'임
- CPTPP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은 전체 수출입의 23.2%, 24.8%를 차지하는 등 CPTPP가 한국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함

2. CPTPP 관련 주요국(美·中·日·韓) 입장

□ 미국

- 최근 미국은 인도·태평양 국가 중심으로 중국의 헤게모니를 억누를 협의체를 만드는 방향으로 선회
 -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3개국 안보 협의체) 출범, 파이브 아이스(Five Eyes,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개국 군사 동맹) 확대 논의 등
- 미국은 다음의 이유로 CPTPP 복귀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
 - 행정부가 신속한 통상협상을 위해 의회에서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무역촉진권한(TPA)이 2021년 6월 이미 만료됨
 - 노동자 중심 정책을 내건 민주당의 노동계 반발 의식
 - CPTPP의 노동, 환경, 디지털 무역 조항은 효과적인 대중 견제에 역부족, 미국의 최대 관심사인 반중 공급망 재편, 반도체, 수출통제, 인프라 관련 규범은 아예 없음
 - TPA 만료 상황에서 출범할 IPEF는 의회 승인이 불필요한 행정협정이 될 가능성 높음
- 나아가 미국 주도의 새로운 경제안보 틀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를 구상, 무역원활화,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경제, 탈탄소 청정에너지, 인프라 협력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일본 등 동맹국, 우호국들과 협조체제를 구축이 핵심
 - 지나 러몬드 美 상무장관의 아시아 순방(일본·싱가포르·말레이시아)이 TPP를 넘어서는 새로운 경제틀 구축을 위한 밑그림이라는 평가(2021.11.17)
 - 캐서린 타이 美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CPTPP 복귀에 대해 "(미국 탈퇴 후) 조문도 바뀌고, (과거 2016년 미국이) 서명한 지 5년도 더 지났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선도

하기 위해서는 직면한 오늘의 과제에 집중하고 싶다”(2021.12.17)

- 우리 정부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IPEF 검토를 위한 ‘IPEF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2021.12.29.)

□ 중국

- 중국은 애초 TPP 결성 초기, ‘미·일 주도의 중국 견제망’이라며 반발했으나, 이제는 TPP의 활용가치에 주목, RCEP과 TPP를 전부 꺼안겠다는 의도로 해석
 - RCEP의 종주국에 해당하는 중국이 CPTPP 가입 신청을 한 이유로는 △미국의 압박 강화, △우방 형성, △중국이 만드는 통상 질서 등이 거론됨
- 계속되는 미·중 무역 분쟁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에는 중국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압박이 점점 거세지자, 중국은 우방 국가를 늘리고자 CPTPP 가입 신청(2021.10.)

□ 일본

- 일본은 CPTPP와 RCEP의 병행을 추진하는 등 Mega-FTA를 통해 경쟁국에 뒤 떨어진 FTA 추격의 수단으로 통상정책을 활용, CPTPP를 통해 미국과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연결고리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평행추로 전략적으로 활용함
 - 이는 CPTPP가 미국發 新보호무역주의와 미·중 통상 마찰에 따른 충격을 일정 부분 흡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됨

□ 한국

- 우리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2021.12.27.)
 - CPTPP 전신인 TPP에 2013년부터 가입을 검토하기 시작한 지 8년 만에,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힘(2021.12.13)
 - 2022년 4월 중, 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임
 -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민감 분야 파급효과와 보완대책 방향을 논의, 대외적으로는

내년 의장국인 싱가포르, 부의장국 멕시코·뉴질랜드를 비롯한 회원국과 비공식 접촉·협의를 진행할 것임

- CPTPP에 가입하면 우리 수출 시장은 한층 넓어지고, 이에 따라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한계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한편, 회원국 전원 찬성을 조건으로 가입을 승인하는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한·일 간 얽혀 있는 외교 관계와 일본 후쿠시마産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한국의 조치로 촉발된 양국 간 분쟁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계류돼있는 상황도 감안할 필요성 제기됨
- 예컨대, 일본 수산물 문제를 풀자면 국내 어민들의 이익 훼손으로 연결될 수 있는 등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음

〈표 2〉 CPTPP 추진 일지

시기	주요내용
2013.11월	한국 정부, CPTPP의 전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공식적인 관심 표명
2017.1월	미국, TPP 탈퇴
2018.3월	일본 주도로 11개국 참여한 CPTPP 출범
2021.9월	중국, 대만, 가입 공식 신청
2021.12월	한국, 가입 추진 공식화

3. CPTPP 특징

□ 주요 특징

- CPTPP는 현존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구
 - 포괄적인 다자 규범 및 강화된 경제협력 조항은 물론이고 기업 친화적인 누적 원산지 규정을 두고 있음
 - 가입국들은 CPTPP를 통해 재료·가치·공정의 누적 원산지 규정을 활용할 수 있게 됨
 - 또한 회원국 내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와 제조 공정을 모두 자국 내에서 창출한 것처럼 계산하여 무관세 혜택을 볼 수 있음

○ CPTPP는 당초 ‘21세기형 무역협정’을 추구, △상품과 서비스 무역 분야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 △WTP-plus 분야에 대한 신무역규범 수립, △무역·투자 관련 규범의 조화를 목적으로 함

- 경제발전 수준이 상이한 선진국, 개도국 회원국이 모두 참여하는 CPTPP는 높은 수준의 규범에 대한 합의를 도출
- 협정 타결을 위해 유예기간 및 예외조항과 당사국별 유보 목록을 협정문과 함께 채택

〈표 3〉 CPTPP와 RCEP 주요 특징 비교

구분	CPTPP	RCEP
공식협상 개시	2010년 3월	2013년 5월
협상 타결	2018년 3월	2020년 11월
세계 GDP/교역 비중	13%/14%	29%/25%
협상 목표	포괄적인 ‘21세기형 FTA’ 체결 통해 신무역규범 도입	기존 ASEAN+1 FTA의 통합을 통해 원산지규정 문제 해소
협상 범위	WTO-plus 규범 (관세+비관세장벽 철폐)	WTO 규범 수준 (관세 철폐 치중)
자유화 수준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	낮은 수준의 무역자유화
협정 타결 형식	일괄타결	점진적·순차적으로 자유화 수준 확대
신규 가입	가입 작업반 절차 통해 가입조건 합의서 기탁일 60일 후 가입 절차 완료	협정 발효 18개월 후 신규 가입 가능
회원국	11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15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ASEAN-10)
공통 회원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 CPTPP는 RCEP 협정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국영기업, 노동, 환경, 경쟁, 투명성, 규제조화 및 금융·통신 서비스 무역 관련 별도의 규범을 도입

4. CPTPP 관련 향후 과제

□ 평가 및 시사점

○ 최근 우리나라의 CPTPP 가입을 두고 贊·反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음

- 찬성 이유: △불참 시, 통상환경에서의 소외 가능성, △경제 성장 가능성, △일본의 까다로운 비관세 장벽 회피 가능, △중국에 대한 전략적 가치 제고 가능
- 반대 이유: △초기 가입국보다 불리한 입장, △미국이 불참하는 CPTPP 가입은 손해, △국내 산업 피해 가능성, △국내법 신설 및 변경의 필요성, △회원국 중 FTA 미체결국은 단 2개국

○ 오늘날 다자무역규범 수립을 위한 협상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CPTPP는 전반적인 규범 분야에서 협상 목표로 설정한 바와 같이,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한 규범을 도입한 것으로, 특히 서비스무역과 투자 시장개방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

-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이행 강제력을 지닌 새로운 무역규범을 수립하여 아시아태평양 역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다자무역규범 수립에 기여, 국영기업의 상업적 활동 관련 불공정 경쟁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무역규범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규범 모델 제시함
- 다만, 환경과 노동 등 기본적으로 무역제한적이며 개도국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지닌 규범을 무역협정에 도입하고 있어 저렴한 생산비용의 강점을 가지며, 글로벌 공급망(Global Value Chain, GVC)의 거점 역할을 하는 아시아 지역공급망(Regional Value Chain, RVC)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아시아 지역 경제 통합도의 제고를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의 무역규범 수준의 제고를 통해 교역·투자 활동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하는 각종 국내규제를 완화 및 철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 한편, 文정부는 CPTPP 가입의 경우 오는 4월 중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3월 대선 이후 사실상 권력이 넘어간 상황에서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

□ 향후 과제

○ 회원국들의 요구 대처

- 기존 회원국 중 반대하는 나라가 없어야 신규 가입이 승인되는데, 일본은 특히 가혹한 조건을 내걸며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려 들 것
- 일본 측이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제징용 판결 집행 문제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를 둘러싼 갈등을 어떤 형태로든 해소해야 할 것
-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농수산물 수출 강국들엔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양허 해준 이상의 농수산물 시장 개방을 허용해줘야 할 것
- 중국이 먼저 가입하게 될 경우, 중국은 우리에게 투자 및 기술이전 요구를 할 것

○ 다자 규제 대비 및 교역 다변화

- 정부는 국내적으로 비관세 장벽 부문에서 규제일관성(regulatory coherence), 국영 무역기업, 경쟁 등의 이슈에 대한 새로운 다자적 규율에 대비해야 할 것
- 우리와 양자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 멕시코와 CPTPP를 통해 새롭게 FTA 관계를 수립하는 효과를 얻게 되므로, 정부는 우리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에 대비해야 할 것

○ CPTPP 협상을 포함해 IPEF에 대한 진단과 RCEP, CPTPP와의 관계 정립 및 향후 전망에 기초한 대응

- 미국의 아시아 전략 중심축이 아세안과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는 해당 지역과의 긴밀한 관계 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것
- 경제안보 시대의 도래에 맞춰 국내 통상 거버넌스도 현재의 FTA 협상 중심에서 공급망 재편, 핵심 기술·산업 육성과 보호, 수출통제 등으로 태세 전환을 해야 할 것